

#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농협 농축산물 매출 4조1200억 목표

## 경제사업 5조8500억 규모 추진

농협 전남지역본부부가 코로나19 확산 3년차를 맞아 농산물 판매 목표를 상향하며 먹거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

올해 농축산물 판매와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목표는 전년보다 각각 1200억원 가량 높게 세웠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농협은 올해 5조8500억원 규모 경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농축산물 판매 4조1200억원 ▲농축협 하나로마트 매출 1조6000억원 ▲연합마케팅사업 4000억원 등이 있다.

전남농협의 올해 전남지역 농축산물 판매 목표는 4조1200억원으로, 전년(4조원) 보다 3.0% 증가했다.

전남농협은 사업장 진도를 월별, 분기별로 분석

## 정부 먹거리 복지사업 연계 농식품바우처 등 참여 독려 강진·장흥·화순 ‘파프리카’ 등 지역별 연계 마케팅 강화

하며 사업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담당하는 경제지원단과 원예농산물 연합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연합사업단, 양곡재단, 축산사업단 등 소관 업무를 나눠 진행한다.

매달 한 차례 사업장 진도분석을 벌여 부진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업무별, 품목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우수 농협과 견학·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각 시·군 농정지원단과 농·축협 간 간담회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판매사업 자료와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환경개선과 컨설팅 등을 통해 올해 총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8.3% 늘렸다. 올해 매출 목표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실적(1조4772억원)보다 8.3%(1228억원) 증가했다.

전남본부는 하나로마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먹거리 복지사업과 연계한 농식품바우처, 임산부구리미 등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하나로유통 호남지사와 전남본부는 마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6가지 유형 적용을 확대한다. 입지·규모·상권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부적으로는 수입 농산물 판매 비중을 줄이고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유통매장 출점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377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연합마케팅사업은 올해 7.4% 늘린 4000억원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참여조합 비율은 전년 42.0%에서 올해 4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연계마케팅도 강화한다.

강진·장흥·화순 생산조직이 문진 파프리카 연합과 ▲보성·곡성·영광 ‘감자’ ▲해남·영암·나주·영광 ‘고구마’ ▲담양·장흥·화순·보성 ‘블루베리’ 등이 중점 육성된다.

이들 통합마케팅조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적 관리와 현장 지도를 벌이고, 기상재해 발생 때는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역연합사업단을 대표하는 주요 품목별로 매출

계획도 세웠다. 무화과는 전년보다 10억원 늘린 125억원 목표를 세웠다. 이외 토마토 38억원(3억원 ↑), 매실 5억5000만원(3600만원), 배 30억원(6억원 ↑), 참다래 6억원(1억원 ↑) 등이 있다.

전남 광역 과실 브랜드 ‘삼겹애’와 ‘오매향’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신안 압해도의 청무화과 영암 신복의 조생단감 서촌 등 소량 생산되는 품종도 틈새를 공략할 계획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최근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활성화를 도모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난 7일 본원 직원 213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뒤 신속항원검사를 벌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기관은 앞으로 2주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KCA 제공)

## “완만한 경기 회복세 유지... 대외 불확실성은 우려”

### 한국개발연구원 '2월 경제동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KDI는 9일 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고 종합 평가했다.

KDI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2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가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 서비스업 ‘코로나 영향’ 개선 자동차 부품수급 차질 일시 완화 원자재값 상승·금융시장은 불안

지난 12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한 데 대해서 “속박·음식점업이 위축됐지만, 여타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고용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에 대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수급 차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KDI는 다만 대외 부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

다. KDI는 “원자재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KDI가 1월 중 진행한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18명은 올해 우리 경제가 3.0%,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에 3%를 상회한 후, 4분기 이후에는 2%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금소법’ 첫해... 펀드 투자자 보호 점수는

은행 36.5점·증권사 46.3점...3년 연속 하락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증권사와 은행의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으로 신규 편입한 광주은행은 평가 첫해 27개사 가운데 18위(B등급)를 기록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9일 발표한 ‘2021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28곳의 판매 절차 점수는 2019년 58.1점, 2020년 50.0점, 2021년 39.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재단은 지난해 은행 12곳,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의 펀드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을 발령했다.

다만 2021년 평가는 금소법 시행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기에 이전 평가 점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업종별 작년 점수를 보면 은행(36.5점)이 증권사(46.4점)보다 부진한 경향이 이어졌다. 2020년(은행 39.0점·증권 62.3점)에 비해 점수 차이는 다소 줄었다.

특히 펀드 판매 절차에서 특히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가 미흡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비율은 10.4%(31건)이었고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16.1%(49건)로 조사됐다.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판매 직원이 점검하지 않은 사례는 51.6%(227건), 설명 후 이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50.0%(220건)에 달했다.

절반 가까이(45.9%·202건)는 소비자가 추천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간이 투자설명서나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7.5%·33건)도 있었다.

재단 측은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 기준에 맞춰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과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시장격리 쌀 평균 낙찰가 6만3763원

### 농가 기대 ‘6만8000원’ 못미쳐

6만 만의 시장격리 쌀 공개경쟁입찰을 벌인 결과 낙찰률 72.6%를 기록했다. 농가가 기대했던 40kg(조곡) 포대당 6만8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6만3763원에 낙찰됐다.

9일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2020년산 시장격리곡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입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공매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입찰 물량은 정부가 시장격리(추가 매입)한

정곡 20만(조곡 27만8000t)이다. 조곡 40kg 기준 694만4444포대가 상장됐다.

이날 낙찰물량은 전체의 72.6% 상당인 504만4440포대(정곡 14만280t)이었다.

전국 농가 63곳, 농협 129곳, 민간RPC 6곳 등 198개 업체가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가격은 40kg 조곡 6만3763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93만4861포대 가운데 158만6180포대가 낙찰되면서 82.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는 6만3853원으로, 낙찰 업체는 48곳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광주시 16일까지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 추가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비율은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이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seisWeb/index.html)을 통해 받는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8월에 이어 10일까지 두 차례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치평동)에서 열린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뜻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24개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61개 사회적기업, 277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8억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은행업무 결재, 모바일로 하세요”

### 광주은행, 기업스마트뱅킹 개편

광주은행이 기업스마트뱅킹 앱에 ‘모바일 승인·결재 서비스’를 담은 등 전면 개편해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승인·결재 서

비스’는 기업의 실무담당자가 인터넷뱅킹에서 결재를 요청하면 결재권자가 모바일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규 설치된 ‘기업금융현황’에서는 기업의 은행 거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메뉴를 통해 기업관리자는 현재 기업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예금·대출·카드 이용현황을 통해 과거 변동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일일금융거래 현황에서는 기업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일일단위 은행거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뱅크스캐줄’에서 대출·카드 결제일 등 금융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구축해 은행 방문 없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OTP(무작위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차기정부,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 중기중앙회 ‘핵심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은 응답자가 33.7% 가장 많았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고,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업 활성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과 불공정거래 과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고,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조프로젝트)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다음달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과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68.85 (+22.38)
▲ 코스닥	910.53 (+15.26)
↓ 금리(국고채 3년)	2.279 (-0.024)
↓ 환율(USD)	1196.50 (-1.20)